

與 “긴축” vs 野 “대수술”... 내년 예산안 심사 전쟁 돌입

정부 657조원 규모안 제출...2.8% 늘어나 20년 만의 최소 증가 폭 민주 “R&D·민생 필수 예산 증액”...노란봉투법·방송3법 대립 예고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레이스에 돌입한다.

지난 31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3일과 6일 경제부처 심사, 7~8일 비경제부처 심사, 9~10일 종합정책질의를 각각 진행할 계획이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도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증·감액 심사와 예결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연구개발(R&D) 예산을 비롯해 세부 항목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가 극명해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및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가 격렬히 대치하는 상황도 예산안 처리 과정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것으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로 20년 만의 최소 증가 폭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긴축 기조에 발맞춰 건전 재정에 방점을 찍고 있다.

윤석열 원내대표는 지난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정건정성 유지는 미래를 위한 고심 어린 선택이며 2024년도 예산안을 관통하는 기본 철학”이라며 “정부 예산안은 국가부채 증가세에 맞춰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은 현명한 예산안”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그러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청년 등 민생 예산의 증점 확보를 강조하는 한편 최대 쟁점인 R&D 예산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R&D 예산 증액 가능성에 대해 “정책위의장이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정부의 R&D 예산 편성안을 세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당의 입장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민생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는 와중에 긴축론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재정 기조의 전면 전환을 요구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전체적으로 민생 문제, 우리나라의 미래, 국가 경제를 다 내팽개친 예산”이라며 “우리가 예산과 관련해 제시하는 실질적인 민생대책을 반드시 수용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당은 R&D를 비롯해 지역화폐·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계대출 등 지원 예산을 반드시 대폭 증액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역을 살리는 예산, R&D 등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등 필수 예산 삭감은 공약 파기 수준의 ‘묻지마’ 삭감”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지위버린 예산을 복원하고 국민의 희망을 되찾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간 팽팽한 대치 전선이 드리운 정국 상황도 이번 예산안 처리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다. 우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다음 달 예산 국회의 항배를 결정할 핵심 뇌관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기필코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지난 26일 이틀 법안의 직회부를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의 견으로 기각하면서 이런 방침은 더욱 확고해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전행 방해) 및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앞서 로텐더홀에서 침묵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권) 행사 권의까지 거론하고 있다.

야당이 수적 우위를 내세워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최근 여야가 체결한 신협정이 무색하게 정국은 다시 급속히 냉각되고 예산안 처리도 험로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여전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누고 있는 검찰 수사의 항배도 예산 국회의 정국을 가름할 잠재적 변수로 주목된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인 2023년도 예산안은 극심한 진통 속에 법정 기한을 22일 넘긴 지난해 12월 24일에 처리됐다. 이는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것으로 기록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치개혁·연금특위 활동 7개월 연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21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 29일까지 7개월 더 연장됐다.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정개혁위와 연금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통과시켰다. 두 특위의 활동 기한이 연장된 것은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와 국회 차원의 연금 개혁안 도출이 끝나지 않아서다. 정개혁위는 선거제 개편안과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을 위해 작년 7월 구성됐다. 당초 지난 4월까

지었던 활동 기한을 10월 말까지 한 차례 연장했으나, 여야는 ‘꿈수 위성정당’ 출연의 빌미가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에 원론적인 공감대를 이룬 것 외에 논의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연금특위 역시 지난 4월까지였던 활동 기한을 10월 말까지 한 차례 연장했으나,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로 내년 총선 전 개혁안 초안을 마련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이병훈 ‘향교 재산 운영 투명성 강화’ 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민주·광주 동남)은 향교재단 이사회의 구성과 향교재산 운영·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향교재산법’ 일부 개정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게 따르면 향교는 지역의 유학교육과 선현의 문묘·제향을 담당하며, 전국에 234곳이 있다. 향교의 유지와 운영을 위해 조성된 재산인 ‘향교재산’은 향교재단이 관리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향교재단은 특별시와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에 설립된 현재 전국에 17개의 향교재단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현행법은 향교재단이 향교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시·도 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향교재산은 문묘의 유지, 유교의 진흥, 교육 및 문화 발전 등 법률에서 정하

는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향교재산을 운영·관리하는 향교재단의 구성에 대한 법률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향교재단의 의사결정이 지역 유림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할 수 있다

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현직 전교와 시·도 유도회 회장을 향교재단의 당연직 이사라고 하고, 이사회 이사장은 시·도 유도회 전체회원으로 구성되는 유림총회에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향교재단의 예산과 결산을 매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해 향교재산 운영·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최권일 기자 cki@



민주 “尹, 경제 위기·국민 삶 대안 없는 맹탕 연설”

“파국적 긴축 예산·부자 감세 유지 입장 불변” 국회 시정연설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두고 “당면한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 의식이나 국민들의 고단한 삶에 대한 공감, 실질적인 대안은 찾아볼 수 없는 ‘맹탕 연설’이다”고 비판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민생을 챙기겠다는 대통령은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연설은 경제 위기를 온몸으로 견뎌야 하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했고, 역대 성과를 자화자찬하며 자기합리화에 급급

했다”며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한 구차한 변명만 장황하게 늘어놓는 대통령을 지켜보며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건전 재정을 앞세운 지출 구조조정이라고 변명하지만, 지역을 살리는 예산, R&D(연구개발)를 비롯해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등 필수 예산 삭감은 공약 파기 수준의 ‘묻지마’ 삭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위버린 예산을 복원하고 국민의 희망을 되찾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아직 투성이 연설이고, 꼭 있어야 하고 필요한 말은 없었던 맹탕 연설”이라며 “여전히 ‘재정 건전성’을 말하며, 파국적 긴축 예산과 부자 감세를 유지하겠다는 대통령의 입장에 변화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은 말 한마디 보태지 않았다”며 “대통령실 전면 쇄신, 야당과의 협치와 소통에 대한 메시지도 일절 담기지 않은 채 독선적 국정 운영을 지속하겠다는 선언만을 한 셈”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칼라강판 지붕공사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농막

옥상스틸방수

MD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창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